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16 _ 2014년 04월

CONTENTS

- | | | |
|----|----------|--|
| 02 | 이미지 단상 | 장애는 흉악 범죄의 원인? |
| 04 | 편집자 편지 | 10년 후의 모니터링센터를 꿈꾸며 |
| 05 | 칼럼 | 장애인지 예산 제도에 대하여 |
| 09 | 이 사람의 향기 | 공부와 토론이 의정활동을 보장합니다. |
| 18 | 의정돋보기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장애인지원 확대해야 |
| 20 | 포커스 | 중앙정부지출 2014년 장애인예산 현황 |
| 30 | 서평 | 욕망은 자유의 원천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 |
| 32 | Cinema | 철인을 동경하는 유리인간 -〈언브레이크블〉 |

10년 후의 모니터링센터를 꿈꾸며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돌아보며 센터는 그간 쌓은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를 뛰어넘어 전문 정책 모니터링센터로서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10년의 도전을 시작하려합니다.

첫째, 양적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 질적인 정책평가와 분석,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석 및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모니터링 사업별로 매년 주요 분석 및 연구주제를 정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보다 효율적이고 활용가능성을 높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입니다. 그동안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쌓아온 자료들이 새로운 법과 제도, 정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될 수 있음에도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누구나 원하는 쉬운 형태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 활동가 및 연구자들의 활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부 장애인관련 단체, 기관,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입니다.

셋째, 단순히 검색·수집만 하던 단원에 대해 관리·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단원들은 1년에 한 번 집합하여 자료검색 및 분류 등, 실무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단원 역량이 모니터자료의 질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단원이 담당하는 모니터링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니터 전문요원으로서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모니터링 자료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하여 장애인관련 정책이 얼마나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편차는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밝혀 각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고 각 지역의 장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년의 시간이 어찌보면 상당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 길지않은 짧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이 단지 우리의 성과에 머물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어린 비판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해 주십시오.

2014년 4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이석구

장애인지 예산 제도에 대하여

글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지체장애인

2012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에는 장애인지예산 제도 시범실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초로 실시하는 전격적인 장애인정책인데, 장애계 일각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오던 중요한 정책 제안중의 하나이다.

시혜와 동정 중심의 장애인 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최근까지 장애인정책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발전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시혜와 동정 중심의 정책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직도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활시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들은 시민과는 달리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이를 테면 취약계층, 소수자)로 치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부양해야하는 잉여적 존재라는 낙인효과까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터닝포인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핵심이 바로 장애인지 예산의 제도화이다.

장애인지 예산을 얘기하려면 먼저 장애인지적 관점의 개념부터 정립해야한다. 장애인지적 관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관점”을 말한다. 이는 특정한 장애인정책 뿐만아니라, 일반(주류)정책까지도 장애인/비장애인의 평등성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평등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국제규범으로써 장애포괄 정책 추구

국제사회에서도 장애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UN의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새천년개발목표(MDGs)”라는 결의안에서 장애주류화를 권고하였고 장애주류화는 장애포괄적 개발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장애포괄적 개발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개발이 의미하는 것은 “장애모델을 ‘의료’에서 ‘사회’로 그리고 ‘권리’에 기반을 둔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정책을 장애인지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지 예산의 개념은 장애인지적 관점이 적용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장애인지 예산이란 장애인/장애인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을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고려하는 관점으로 배분구조를 적용하여 편성한 예산이다. 기존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만을 위해 만들어놓은 개별적인 장애인정책 예산을 넘어서 보편적인 일반정책예산에 점진적으로 장애인을 관점을 포함시키는 예산이 장애인지 예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지적 예산은 성인지 예산의 방법론과 이념을 대폭 참고 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성주류화를 위해 모든 정책에서 성별 영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 실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화도되었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지예산 제도는 2004년부터 핀란드의 개발정책에 “장애를 성(gender)과 환경(enviromet)문제와 더불어 중심이슈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핀란드나 일부 유럽국가의 장애인 정책은 동성이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각 부처의 보편적인 정책 예산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장애/비장애인의 평등성을 배려하여 방식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지 예산 제도 왜 해야 할까?

장애인지적 관점으로 나뉘는 예산의 종류

예산 종류	내 용
장애정책예산	장애인을 위한 특정 정책 예산
일반예산	장애정책예산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정책 예산

위의 도표는 예산을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분류해본 것인데, 이중 주류정책예산에 속하는 일반정책예산은 장애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어있지 않다. 즉 정책의 수행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실행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 대한 불평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We start 사업을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분석해본 결과, 사업 참여가능 아동 인구 비율이 비장애아동 93.2%, 장애아동 6.8%인 반면 실제 참여한 아동 비율은 비장애/장애 95.4%, 4.6%로 나타남으로써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경우 We start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진입장벽이 높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반 정책 사업 수행시 장애인에 대한 영향 분석이 되지않아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장애인/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의 자원 배분을 해야 한다. 장애인지 예산은 장애인정책예산은 당연히 포함되고 거기에다 일반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철저히 적용시켜 편성한 예산까지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지 예산은 보건복지 예산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지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예산에 국한된다는 생각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무원도 버려야 한다. 중앙정부 장애인정책예산을 알아보면 2013년 장

- 1) 권선진 외, [장애주류화 관점의 정책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2
- 2) 황주희 외, [공적개발원조(ODA)의 장애주류화 방안 연구] 장애인개발원, 2012
- 3) 김동기, [사회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지예산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08,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4) 같은 책

애인 예산은 1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고작 0.49% 수준이며 복지재정(2013년 복지예산은 97조 4,000억원)의 1.7%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장애인 예산의 70% 이상이 보건복지부 예산이다. 그렇다면 99.5%의 일반 정책 예산은 장애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장애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콘크리트같은 이 99.5% 예산이다.

진정한 장애주류화 전략 필요.

그렇다면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는 무엇을 목표로 도입되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장애주류화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보편적 정책과 그 예산에 장애 이슈를 포괄시키는 전략이 장애주류화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을 재활시켜 주류사회에 진입시키려했던 주류화(mainstreaming)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정한 장애주류화란 장애인에 대한 기회 평등과 권리를 기반으로 장애감수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장애주류화를 통해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꾸는 운동을 줄기차게 해왔던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장애주류화 전략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장애 주류화를 가능케하는 장애인지 제도의 법제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장애인지 예산 제도화라는 핵심 이유를 가지고 장애인계가 연대하여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전에 장애인계가 술선수범해서 일반정책의 장애영향분석을 해마다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서울시의 예에서 보듯 지방자치제도의 일환으로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정책이다.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지자체에도 장애인지 예산 제도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폭넓은 정치참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부와 토론이 의정활동을 보장합니다.

인터뷰 · 정리 김경희/김익수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복지 연구모임' 과 함께 한 김경희 의원(좌측 가운데)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다.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한다. 초선의원이란 긴장과 두려움이 클 것이나 2선의원쯤 되면 고민도 남다를 듯하다. 고민과 의욕을 당사자의원에게 직접 물었다.

Q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원 김경희입니다. 다음 세대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의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눈물”로 유명한 문성근의 연설을 보고 정치에 관심이 생겨, 당시 아이들이 자랐을 때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 기초지방의회에 비례대표제가 생겨 주변사람의 권유로 출마했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컴퓨터 강사로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소속 단체인 지역예산정책연구회 회장일을 했고요. 네트워크는 의회 방청 및 회의록 분석,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의 활동을 하는 고양시 시민단체였습니다. 지역예산정책연구회는 네트워크에서 3년여 간 고양시의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의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당원들의 시의원 출마권유가 있었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Q 자료를 찾아보니 그간 고양시의 복지 확충, 아동청소년 지원, 여성취업창업 지원, 주민 참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펼치셨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정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셨습니다. 정책활동 성과는 평소 부단한 노력에서 나온다고 할 때, 주로 아이디어와 정보는 어떻게 얻고 계신지 질문해도 될까요?

2008년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 되자 다양한 복지분야 중 장애인복지가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시각장애 6급이지만, 장애유형별로 복지요구가 달라서 어떤 정책을 운영하기가 힘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평소 잘 아는 복지관 관장님이 의원 1인당 1주제의 연구모임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구성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연구모임은 장애인당사자, 사회복지사, 장애인학부모, 교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활동 주제는 장애인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인 문제인 교통이동권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2009년 5월 열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이라 특별교통수단이라고는 몇 개 복지관에서 보유한 것이 다였고, 저상버스도 몇 대 안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제작비용과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 모차과원장님께 후원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모임은 만들었지만 회비 내서 밥먹는 모임이라 행사를 하려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월 1회나 2회 만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 재개정 등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했던 시정질문은 이동권의 어려움을 담은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기획회의 촬영, 연기 모두 회원이 했던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상영하며 시정질문했고, 복지과장으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받았습니. 시정질문하고 감사인사를 받

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연구모임을 만든 이유는 시의원이라는 직업이 너무나 산만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민원과 업무들이 많고 챙길 일이 많아서 장기간 관심을 갖고 정책연구해야 하는 일은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관심있는 단체를 간사단체로 하고 회의는 제가 주도하여 회의진행과 안건제안 역할을 했습니다. 모임 구성시에는 전문성과 인간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싫으면 함께 회의도 하기 싫으니까 평판이 좋은 분이면서 전문성, 열정도 겸비한 분으로 잘 섭외하고 업무분담을 잘해야 합니다. 고양시저소득노인의료비정책연구모임은 2013년 1월 구성하여 5월 토론회, 12월 의회에 조례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고양시 보행환경개선연구모임은 2012년 5월 구성해 7월 블라드, 점자유도블럭, 신호등 음향신호기의 조사 실시, 9월 결과 보고회 및 11월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는 다양한 곳에서 얻습니다. 다른 지방의원과의 연구모임, 교류, 외국연수, 지방연수, 자료집, 독서, 주변분과의 토론 등 모든 것이 연구자료라고 생각합니다.

Q 장애를 소외계층 문제로만 접근하다보니 일부 의원들이 동정과 시혜 차원으로 사고하기도 하는데, 더욱이 장애 유형별·정도별로 다르고 또한 당사자가 처한 환경에 의해 문제가 증첩되기도 해서 의원들의 현안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증장애인 문제를 이동권, 자립생활 등 비교적 맥을 잘 짚었다고 평가받고 계신데요. 그 비결은? 관련해서 장애인 문제를 의회에서 다뤄보고 싶은 후배 의원들에게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먼저 저는 시각장애6급입니다. 2000년 복지카드를 만들었는데, 2006년 선거를 치르면서 고양시시각장애인지회에 회원가입했습니다. 지방의원이 되니 제가 장애인으로써 혜택만 보는 것 같아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애인복지를 접하고 느낀 점이 바로 장애유형에 따라 복지요구가 달라, 정책화하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장애체험을 하고, 장애유형별 지인을 알게 되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발언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회발언(속기록에 남는 공개발언)에는 많은 경험과 학습이 있어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 5월 고양시청 장애체험 행사(장애인복지연구모임 주관) 결과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경사로와 자동문이 신축되었다〉



휠체어용 경사로(좌측)와 자동문(중앙)



고양시청 무인민원발급기(맨 우측)

Q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공모한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또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자체정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요?

매니페스토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약의 양적 이행도 중요하지만 공약이행 과정과 질적인 부분까지 심사하는 대회로 공약이행의 양적 성과를 비교하는 매니페스토 대회와 구분됩니다. 2010년 재선에 도전시 '장애인콜택시 설치운영'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장애인이 동권토론회 등 '고양시장애인복지연구모임'의 연구결과에 따라 장애인이동권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자립생활이 가능하겠구나하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약이행 결과는 금년까지 법정 최소숫자인 45대를 넘어서 48대까지 확보 예정입니다. 사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천대상을 선정하는 공모사업과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실천대상이 공약이행의 양적 판단을 한다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약이행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질적 판단을 합니다. 즉 공약이행 정도도 참고하지만 본인이 강조하는 분야에 대한 자료를 집중 평가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고양시장애인정책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이런 사례는 다른 지자체나 지방의원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간의 연구모임을 평가 받은 것이라 제가 대표로 받았지만 회원들이 함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아..장애인콜택시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셨군요. 원래 돈 들어가는 공약은 행정부에서 난감해하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요(웃음) 지자체들이 대개 그렇지만 고양시

나 경기도도 과거 사오 년 전만해도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콜') 법정 도입대 수가 평균 이하였습니다¹⁾, 하지만 최근 개선되고 있습니다(고양시는 작년에 법정도입대 수가 충족되었죠?).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상임위 질의등 의정활동 시 계속해서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동지원차량이 장애인이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게 많은 차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12년 9월 고양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통상 조례 제정 시, 의원은 실효성 있는 법규조항을 만들고자 의욕적인 반면, 집행부는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다반사인데요. 당시에도 집행부안과 장애계안이 대립된 걸로 들었습니다만.

새로운 가치를 도입하는 일에 적극적인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법에 근거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고, 법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합의기 때문이지요. 공무원이 개혁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 봐야지요. 하지만 누군가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발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에 좋은 위치가 지방의원입니다. 시민단체는 타당성을 근거로 개혁적인 주장을 하고 공무원은 법적 근거와 형평성 등으로 보수적으로 의견이 대립될 때 지방의원은 합리적으로 타지역사례, 실제 발생하는 현상과 법적인 문제점을 예로 들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무원에게 설득하는 거죠. 공무원에게 설득하기 가장 좋은 자료는 타지역의 성공사례입니다. 그런 자료를 시민단체를 통해 입수하거나 타지역 지방의원,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하면 훨씬 좋습니다. 중증장애인지원조례는 많은 법률에 근거하고, 집행에 따라서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것이어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법률근거가 있으면 애매한 일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공무원으로써 감사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이 많은 것은 일하기 싫어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의 재활병원에 의회연수차 다녀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곳은 산업재해로 중도장애를 입은 분들이 재활

1) 예컨대 2011년도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고작 129대, 법정도입율의 23%에 불과했다. 당시 전국 법정도입율 평균이 45%였을 때 경기도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자료출처 : 이병원,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12.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출간). p.8 [표1] 전국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현황

하는 병원이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교육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살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작은 턱 넘기, 손 사용이 어려운 분이 식사하기, 하지절단 장애인에게는 승마를 통해 중심잡기를 교육하는 식이죠. 같은 연수에서 독일의 청소년장애인직업재활 교육센터의 센터장이신 신부님이 하신 “누구나 신에게서 받은 침해받을수 없는 권리가 있다” 는 말씀이 자립생활의 기본정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이하 ‘유디’)조례 제정에 관심이 많으시죠? 유디는 사용자의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습니다. 때문에 유디 개념에 함축된 원리는 심오할 수 있겠으나,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유디점목의 대상이 고양시 전체라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구성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분야는 우리 연구모임에서 개념연구와 조례에 대해 다루었는데 한두차례만 해서 깊이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연구모임과 고양시 뉴타운사업과에서 함께 참여한 유디탐방으로 고양시의 달동네 ‘유곽골’이라는 무허가 난개발지역에 갔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곳은 만약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마을 길이 가파라서 등산로프를 매어두고 노인이나 눈이 오면 잡고 올라가는 정도의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의 경감이 유디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디가 결국 절박한 사람들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많은 불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디라고 말하지만 누구에게도 편안한 환경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기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유디는 조금씩의 배려입니다.

Q 우리 기관은 장애인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인데요. 특히 지방의회 장애인관련 의정활동을 8년 동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만, 오래 하다 보니 의원님들의 장애인정책 의원활동이 거의 변화 없이 민원성 발언에 머물거나 현황 파악성 질의로 일관하여 장애인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적 대안이 나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거의 매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께서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에서 느끼는 고민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지방의회에서 장애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보완돼야 할까요?

의회에서 의원의 질의는 평소 연구와 고민의 결과입니다. 비회기중에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발언할 때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기 보다 단순질의에 그치게 됩니다. 지자체의 복지업무 권한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과 절차, 대상 등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업무양이 많고, 신규사업의 경우 책임한계 등으로 인해 특수시책사업을 개발,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서 저는 장애인 정책연구모임의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분제는 복지분야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 도시계획, 도로정책, 대중교통, 지역경제, 일자리, 행정 전반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지방의원의 장애인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를 활용한 정책공약 체결과 당선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네. 그렇군요.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지방의회와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거라 믿구요. 아울러 시민단체에 제안하실 사업이 있다면?

장애인의 삶의 여건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인식개선’과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은 정책결정자인 지방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례화하여, 결국 지방공무원의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학교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해 장애인 감수성이 높은 시민들을 길러내면 편견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장애복지 관련 법(조례)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법률(조례)의 장애유형별 대상과 수혜 정도를 포함하여 연구하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복지혜택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벤치마킹하시면 좋은 사례를 발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 정당이나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정치입문 아카데미에 장애인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강좌를 배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장애체험도 해보게 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다문화나 노인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Q 이동권 문제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행정부의 개선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뿐더러 당사자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는 걸 실감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 더 큰 사명감으로 응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욕이 저하되거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의정활동에서 열의나 의욕을 잃지 않는 특별한 자기관리법이 있으시지요?

고양시에는 2011년 3월 교통약자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3월 제142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2011년 1월 6일 고양시 진단조직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이동편의증진팀의 신설을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새로 선출된 같은 당 시장에게 설득한 결과입니다. 교통약자지원팀은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교통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므로 별도의 팀을 신설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중이었습니다. 사전에 서울시 해당부서의 업무내용확인도 했습니다. 신설 된 후에도 부서의 인식이 부족하여 수차례 담당자에게 필요한 활동에 대해 얘기해주었지만 업무지휘체계에 의한 지시가 아닙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2012년 교통약자지원팀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회질의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해보니 교통약자지원팀은 고양시교통약자지원센터의 지원업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같이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중으로 버스기사의 저상버스운행에 대한 별도 교육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약자지원팀으로 업무조정을 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었고, 2013년 초에 반영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특별교육도 계획되었습니다. 한 분야에 대한 활동을 말씀드렸는데, 초선때는 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첫째, 의원인 제가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초선의원은 알잡아보기 십상이라 정확한 업무자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안주기도 합니다. 한두번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소문이 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 업무 파악이 용이하겠죠.

둘째, 교통약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제가 알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외부 전문가와 끝없는 소통이 있었죠. 특히, 장애복지연구모임 회장인 안미선님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과 회원여러분입니다. 평소에 같이 늘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별로 필요한 자료의 요청 자문 등이 가능했습니다.

셋째, 업무이해와 현실자료가 있다면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질의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 의원들과 해당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 많은 수가 아니고 지방의원이 독점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비교자료와 현실에 근거한 적

절한 질문 등으로 공무원은 할말이 없게 됩니다. 상임위원들과 공무원을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질의하면 됩니다.

넷째, 업무를 추진하려면 집요해야 됩니다. 교통약지지원팀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법적 부서가 아니므로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확인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정말 관심있어야 되겠죠.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Q 아닙니다. 경험에 기초한 실증적인 답변은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선 의원이라면 의정활동도 익숙하실 테고 자기 식견도 확립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은 무엇입니까?

의정활동은 평범한 사람인 주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대변한다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늘상 같은 마음입니다. 제 활동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지역내 업무적 네트워크를 한층 더 돈독하게 만들고, 장애인복지연구모임 등 필요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정책 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연구모임을 총괄한 포럼을 만들어 뜻맞는 의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은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든 업무범위를 벗어나든 무엇이든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분이 힘을 얻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방의원이 관심을 갖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내기도 합니다. 업무결과 못지 않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주민의 말을 늘 듣는 자세,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의원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오랜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장애인지원 확대해야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도우미(이하 산모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쌍생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산모에게는 서비스의 양을 최대 24일(1일 8시간 기준)까지 제공하고 있다.

구분	서비스가격 (A=B+C)	소득	정부지원금(B)	본인부담금(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평균소득 50%이하	최대 613,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2주(12일)
쌍생아	최대 1,457,000원	평균소득 50%이하	최대 1,167,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158,000원	평균소득 50%이하	최대 1,751,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4주(24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한편 장애인 산모가 하루 8시간의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은 나머지 시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출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이밖에 지자체에 따라 장애인가정(여성)에 대한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산모에 대해 몇몇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모도우미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모두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대상과 시간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2급 이상 장애인으로, 3급 이하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장애 2급 이상인 산모의 경우 4주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3급 이하 산모는 비장애인 산모와 마찬가지로 2주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장애인 산모는 산모도우미 제도의 사각 지대로 남는다. 출산 전후 장애인 산모는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 이관식 위원** 2012년 350만원으로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를 이용한 수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김은숙**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자체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기간은 약 2주이며 바우처 지원액이 1인당 55만원에서 59만 6,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 이관식 위원** 여성장애인?
- 보건소장 김은숙** 장애인은 따로 있고요.
- 이관식 위원** 여성장애인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조건과 몇 달인지, 2012년도 도우미 지원 받은 가정이 몇 가정인지요?
- 보건소장 김은숙** 지원대상은 우리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가 경과한 장애인 임산부이고요. 앞에 있는 산모도우미는 전국 월평균 50% 이하의 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이것을 제외한 장애인 임산부가 되겠고 장애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4주, 장애 3등급에서 6등급은 2주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쓸 수가 있고 그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도 신청건수는 4건이었고 2건 지원한 상태입니다.
- 이관식 위원** 4건 신청했는데 2건만 지원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은숙**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만 해놓고 분만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 이관식 위원** 35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김은숙** 예,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주지역 기초지자체에서는 산모도우미 지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산모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의 사각지대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를 초과한 장애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위의 글은 광주광역시의 산모도우미지원 정책과 관련한 이관식 북구의회 의원의 질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 정책 우수 사례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도 단순히 지원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 산모에게 지원되는 최대 4주인 제공시간을 최대 8주로 늘려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지출 2014년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



이병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2014년 중앙정부 총 장애인예산은 1조 9,164억원으로 작년 대비 2,248억원(13%) 증가
-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예산 증가율은 노인예산 증가율의 1/3, 보육 및 저출산예산 증가율의 1/2에 불과
-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예산은 1조 3,666억원으로 전체 장애인예산의 71.3% 비중을 차지, 5년전에 비해 10% 상승, 이는 장애인예산의 보건복지부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
-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예산 중 장애인연금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의 총액은 작년보다 99억 감소
- 전체 장애인예산 대비 국토교통부의 장애인예산 비율은 2010년 8.8%에서 매년 감소하여 올해 5.5% 수준
- 박근혜대통령의 장애인정책 주요공약(장애인연금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확대, 장애인고용창출, 장애인이동권 향상)은 올해 예산을 보았을 때 지키기 힘들 것으로 예상 됨

올해 중앙정부지출 장애인예산은 총 1조 9,16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중앙정부 예산 355조 8천억원의 0.54%, 전체 복지재정 106조 4천억원의 1.8% 수준이다. 또한 작년에 비해 13%가 늘어 총 장애인예산은 2,248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중앙정부의 예산 중 장애인예산을 발췌한 것으로 협의의 장애인 예산(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과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 50개의 예산을 모두 포함하여 통계하였다. 이 중 13개 부서에서 장애인 예산이 발견되었다.

2010~2014년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경찰청	2,000	0.2	3,000	0.2	1,000	0.1	-	-	-	-
산업통상자원부									1,800	0.1%
고용노동부	196,755	16.3	186,586	14.6	186,877	13.2	201,743	11.9	260,539	13.6%
교육과학기술부	45,027	3.7	44,872	3.5	43,338	3.1	50,331	3.0	54,382	2.8%
문화재청	270	0.0	265	0.0	423	0.0	-	0.0	72	0.0%
문화체육관광부	38,664	3.2	44,002	3.4	54,772	3.9	60,773	3.6	84,027	4.4%
방송통신위원회	5,416	0.4	6,223	0.5	6,873	0.5	8,600	0.5	9,444	0.5%
보건복지부	741,617	61.4	860,051	67.1	981,151	69.2	1,208,701	71.5	1,366,389	71.4%
산림청	1,400	0.1	400	0.0	1,424	0.1	1,424	0.1	-	-
여성가족부	1,226	0.1	1,263	0.1	1,263	0.1	1,263	0.1	1,289	0.1%
국가인권위원회	380	0.0	593	0.0	442	0.0	531	0.0	395	0.0%
중소기업청	2,000	0.2	1,620	0.1	2,500	0.2	5,301	0.3	6,201	0.3%
행정안전부	11,355	0.9	10,130	0.8	10,230	0.7	15,070	0.9		0.0%
미래창조과학부									15,158	0.8%
국토해양부	106,837	8.8	95,286	7.4	99,984	7.1	114,188	6.8	103,978	5.4%
합계(A)	1,207,747	100.0	1,282,091	100.0	1,417,577	100.0	1,691,525	100.0	1,915,014	100.0
복지재정(역원)(B)	812,466		863,929		919,269					
비율(A/B)	1.5		1.5		1.5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 1,577억원이 늘어난 1조 3,666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13%가 증가한 것이다. 작년 대비 14.2% 증가한 보건복지부 총 예산 증가율¹⁾보다 낮

1)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2013년 410,643억원, 2014년 468,995억원이다.

다. 특히 노인분야 증가율²⁾인 48.7%에 1/3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육 및 저출산 예산이 2012년부터 매년 20~30%의 증가율³⁾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의 최근 3개년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가율 추이(2011~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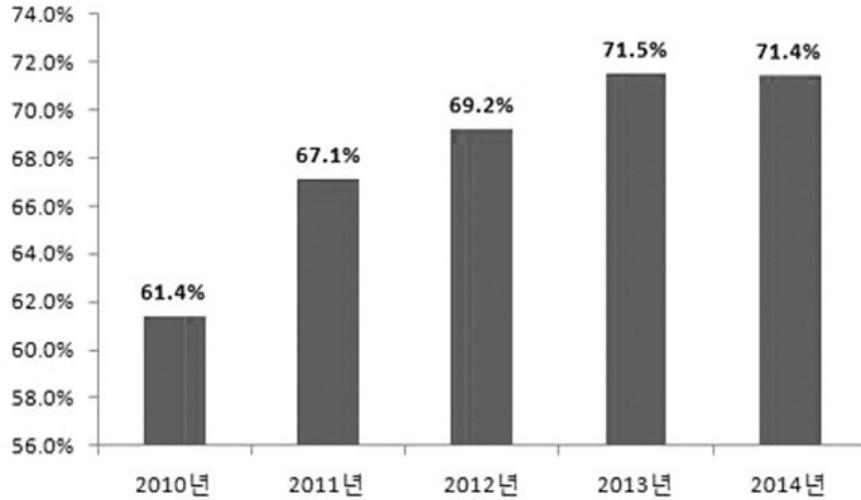
	2011-2012년 증가율	2012-2013년 증가율	2013-2014년 증가율	비고
보건복지부 예산	9.3%	11.9%	14.2%	
○ 기초생활보장 예산	5.1%	8.2%	3.2%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등
○ 취약계층지원 예산	13.1%	16.4%	10.7%	장애인, 아동 등
○ 공적연금 예산	14.0%	8.9%	12.3%	국민연금급여 등
○ 보육 예산	21.1%	34.8%	27.5%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 노인 예산	4.6%	10.0%	48.7%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등
○ 사회복지일반 예산	5.8%	17.2%	9.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등
○ 보건의료 예산	1.6%	22.0%	- 0.2%	전문질환센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등
○ 건강보험 예산	5.3%	8.3%	7.0%	보험가입자 지원 등
* 장애인 ⁴⁾	14.1%	23.2%	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은 중앙정부 총 장애인 예산 중 7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2013년에 비해 0.2% 소폭 감소했지만 2010년에는 61.4%의 비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10%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내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상대적인 예산 비율이 5년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의 증가는 장애인연금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주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이 4,660억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1,212억원이 늘었다. 활동지원예산 또한 456억원이 늘어난 4,28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두 사업의 증가액을 합치면 1,676억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의 증가액인 1,577억보다 99억원 많다. 즉 이 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의 총 예산은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이들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수혜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반면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19억원이 감

중앙정부지출 총 장애인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비율 증가 추이

(%)



소한 1,056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장애인의료비도 작년 422억원에서 181억원이 감소(42.9% 감소)하여 24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장애인의료비가 포함된 취약계층의료비지원⁵⁾ 예산이 17.3%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장애인예산은 매우 실망스럽다. 앞서도 밝힌 바대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 외 12개 부서의 장애인예산은 협소하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부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2,601억원으로 중앙정부지출 총 장애인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국토교통부(1,040억원, 5.4%), 문화체육관광부(840억원, 4.4%)이다.

2)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분야 예산은 2013년 42,937억원, 2014년 63,848억원이다.

3)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및 저출산 예산은 2011년 25,600억원, 2012년 30,999억원, 2013년 41,778억원, 2014년 53,279억원이다.

4) 위 표의 장애인예산 증가율은 모니터링센터가 보건복지부 8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편성되어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의 총액의 증가율을 집계한 것이다.

5)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사업에는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차상위계층지원 예산 증가율은 올해 29.8%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소관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장애인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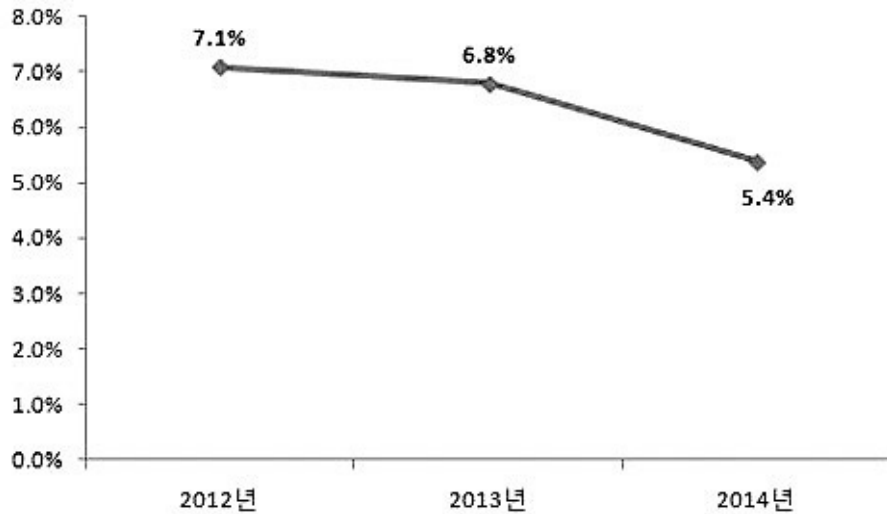
(백만원)

사업명	13년 예산(A)	14년 예산(B)	감소액 (B-A)	비고
장애수당 (차상위 등)	54,945	52,689	△2,256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009	747	△262	대상인원 : 3,454명 → 1,650명
장애인 보조기구지원	3,434	3,425	△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875	4,660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3,370→3,360백만원 ·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315→350백만원 ·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500→450백만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 90→100백만원 ·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600→400백만원
장애인지원관리	742	668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건강관리: 314→276백만원 · 장애인정책연구: 200→170백만원 · 일반경상경비등: 228→222백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60	405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홍보: 110→89백만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150→121백만원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150백만원(전년동) · 장애체험센터 운영: 50→45백만원
장애인운전 교육장임차 및 순회교육	604	544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운전임차교육: 247→207백만원 · 장애인 운전순회교육: 357→337백만원
장애인 자립자금이자 및 손실보전금	1,400	1,068	△33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8,441	41,101	△7,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4,508→11,455백만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721→618백만원

특히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예산은 매우 아쉽다. 총 장애인예산 대비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에는 비율이 7.1%였으나 2013년도에는 6.8%로 감소 하더니 올해는 1.3%감소한 5.5%에 불과하다.

2012~2014년 중앙정부지출 장애인예산 중 국토교통부 예산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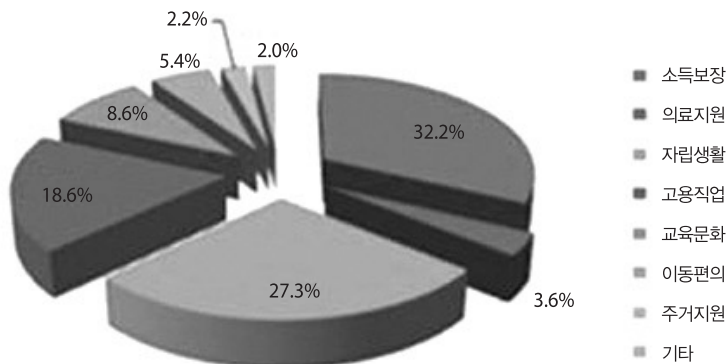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상버스 예산이 378억으로 작년보다 42억원 감소했다. 아직 저상버스도 입찰이 정부의 도입계획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예산삭감은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특별교통수단은 예산안에서 45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10억원이 증액돼 작년에 비해 5억원이 늘어난 5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사업 역시 62억 감소돼 120억으로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840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억 증가했다. 전체 장애인예산 대비 비율 역시 3.6%에서 4.4%로 올라갔다. 이는 올해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금액이 100억 이상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장애인인권증진사업비를 삭감하여 장애계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예산도 삭감됐다. 장애인인권증진사업비는 올해 395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36백만원이 삭감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비판 이후 2013년에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 또다시 삭감한 것이다. 특히 올해 예산은 2012년 442백만원보다도 47백만원이 줄은 것이다.

2014년 장애인예산 분야별 비율



장애인예산을 8개 분야⁶⁾(소득보장, 의료지원, 자립생활지원, 고용직업재활, 교육문화, 이동편의, 주거지원,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면 역시 소득보장분야가 32.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3%증가한 것으로 장애인연금대상자의 확대가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자립생활지원분야가 27.3%로 다음을 차지했다. 매년 큰 변동이 없는 분야는 교육문화분야와 주거지원분야인데 교육문화분야는 매년 7~8%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올해에는 8.6%의 비율로 나타났다. 주거지원 역시 2~3%를 오르내리다 올해 2.2%를 차지했다. 이동편의분야는 2010년 8.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에는 5.5%에 불과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국토교통부의 이동권 저상버스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료보장은 31.5%⁷⁾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 장애인예산 중 의료지원예산은 3.6%에 불과해 장애인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석은 이 정부가 앞으로 펼칠 장애인 정책의 바로미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후보시절 내세운 장애인정책공약과 올해 주요사업의 예산을 맞물려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일단 장애인연금의 공약은 올해에 반영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⁸⁾하겠다고 공약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2010~2014년 분야별 장애인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분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소득보장	428,142	35.4	438,330	34.2	448,316	31.6	494,139	29.2	615,720	32.2
의료지원	31,131	2.6	38,655	3.0	37,258	2.6	98,942	5.8	68,842	3.6
자립생활지원	239,452	19.8	271,717	21.2	373,381	26.3	458,735	27.1	522,949	27.3
고용직업재활	257,198	21.3	268,912	21.0	277,804	19.6	305,982	18.1	356,894	18.6
교육문화	89,377	7.4	95,362	7.4	115,213	8.1	134,774	8.0	165,212	8.6
이동편의	106,837	8.8	95,286	7.4	102,031	7.2	114,914	6.8	103,352	5.4
주거지원	25,350	2.1	33,350	2.6	31,939	2.3	50,341	3.0	42,811	2.2
기타	30,260	2.5	40,479	3.2	31,635	2.2	33,698	2.0	39,234	2.0
합계	1,207,747	100.0	1,282,091	100.0	1,417,577	100.0	1,691,525	100.0	1,915,014	100.0

월평균소득(A값)의 10%로 20만원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당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2회에 걸쳐 총 5만원 인상)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초급여는 공약대로 9만7천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지급대상은 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70%로 정했다. 또한 부가급여는 전년과 동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은 4,660억원으로 확정됐다. 만일 공약대로 중증장애인 100%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 6,433억원이 필요하다.¹⁰⁾ 사실상 파기와 다름없다.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역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월 720시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종장애인으로 나머지 가

6) 광범위하게 분류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4대분야(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를 모니터링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분류법으로 재구성함.

7)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24P

8)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책임있는 변화> 57P, 88P

9) 새누리당 2012년 총선 공약집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32P

10)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28P

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65세 이상의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올해 이들이 보장받는 시간은 기본급여 118시간에 추가급여¹¹⁾ 최대 250시간을 보장받더라도 월 368시간으로 일 평균 12시간에 불과하다. 올해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938,800원으로 2013년도와 동일하다. 다만 지원대상이 4.8만명에서 5.4만명으로 늘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4,28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14년도에 수급대상자 추가확대를 검토¹²⁾하겠다는 것 역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관련예산은 답보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공약을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하겠다는 실천목표를 세운바 있다. 하지만 올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41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오히려 2억원가량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 공약에 5년간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소관인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89억원 증액됐지만 이 역시 한시적 일자리이며 임금수준도 낮다.¹³⁾ 특히 장애인복지일자리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히 장애인에게 할당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작년에 각각 145억, 5억씩 편성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30억 삭감됐다. 신규장애인일자리 개발 및 시범사업예산도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고용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으로 대표되는 이동권 공약 역시 오히려 후퇴수준이다. 법정수준까지 도입하겠다는 저상버스 예산이 42억 감소한 378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해 평균 837억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예산에 45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10억원이 추가돼 55억원으로 증액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를 위해서도 한해 평균 6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예산은 아쉽다.

건강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장애인의료비 241억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1억 삭감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대상인원은 5천명 감소한 91,982명으로 잡았으며 지원단가 역시 1인당 2만원 삭감된 333,902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공약을 위해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필요시설확충'을 실천방향으로 잡았던 것과 달리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비도 전년도 721백만원에서 올해 618만원으로 감소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역시 시설장비비 6억을 삭감(운영비는 2억 증액)하여 공약실현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다양한 사업진행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장애인의 문화권리를 위한 예산은 크게 증액됐지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및 전문체육중심으로 편성됐다.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결임에 반해 장애인전문체육 지원은 10억 이상 증액됐으며 국가대표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지원, 장애인 국제스포츠교류지원 예산 역시 25억 증액됐다.

이번 예산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예산은 올해 13% 증가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 중 이들 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총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두 개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을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둘째, 장애인예산의 보건복지부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총 장애인예산 중 보건복지부와 그 외 부서의 장애인예산 비율은 6:4수준이었으나 올해는 7:3수준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교육, 노동, 문화, 이동 등 장애인의 사회적참여가 필요한 예산에서 배제시키고 장애인을 그저 복지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련의 행태들이 정부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올해 예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정책 공약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연금 급여 및 대상자 확대공약은 축소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공약 역시 이번 예산에서도 일 최대 12시간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올해 축소됐으며 저상버스를 법정대수만큼 도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올해 예산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도 장애인의료비의 대폭 축소로 돌아왔다.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1의 2: 출산 여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선정

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77P

13)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 일반형 일자리 임금 1,089천원/월, 장애인복지 일자리 임금 292천원/월.

욕망은 자유의 원천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

글 윤성희 모니터링 단원



속내는 심각한데 그런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 저자의 심기가 그렇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저자처럼 ‘부끄럽고 소극적’¹⁾인 성격이면 물어볼 수도 없고 전전공공일 수밖에. 이쯤되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말처럼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 된다.

골형성부전증²⁾이라는 (발음도 어려운) 병명이 지은이 김원영(82년생)의 손상명이다(지체장애 1급). 그런데 책 소개는 손상과 스펙의 대조에 크게 의지한다. 열다섯 살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지냄, 초등학교는 검정고시, 특수학교 입학(비극의 연속) 그런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중(반전). 장애만 빼면 속된 말로 엄친아가 아닌가.

중증장애와 화려한 스펙의 앙상블은 독자에게 어필하는 섹시한 조합이 아닐까(책 양장조차 빨갳다) 그래서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다. 장애인의 삶의 고백은 이래야만 팔리나? 저자도 출판사 판매전략이 달갑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럼에도 커밍아웃한 이유는 뭘까? 억압됐던 자기 목소리를 내면 당장은 후련하나 일시적이다. 반면 손상의 고통은 더 선명해지지 않는지.

1) 저자가 자신의 성격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 책 p.130

2)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도 뼈가 잘 부러지는 질환. 지속적으로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성장을 마친 뒤에도 키가 작은 경우가 많으며, 골절로 인해 성장판을 다치게 되면 양쪽 뼈가 다르게 자라는 바람에 다리 길이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2920&cid=40942&categoryId=32783>

우리는...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것은 “나는 장애인입니다”하며 ‘커밍아웃’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었다. 학생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기도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친구들이 서명을 하러 다가올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만큼은 ‘평범한’ 존재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p.130)

저자는 양가 감정을 느끼며 미셸 우엘벡(Michel Houellebecq, 1958~)의 소설 『투쟁 영역의 확장(1994)』을 인용한다. (p.188) 절망과 무기력으로 욕망은 사라지고 고통만 남은 소설 주인공이 저자와 겹친다.

무릇 장애인은 무성적 존재³⁾로 인식된다. 이게 진짜 심각한 차별이다. 가령 편의시설 미비 같은 눈에 보이는 차별은 싸워서 제도를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심리적 억압과 타자의 무의식적 배제는 문제가 다르다. 저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성들 앞에서 연애에 초탈한 채 지적 교류에만 관심있는 척 살았다고 토로한다. 남들보다 화려한 스펙도 욕망을 억압하는데 한몫했다. 그런 저자가 한 여인을 만나 고백한다. 동시에 그는 손상이 더 큰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 때문에 뒤통수가 따끔하다. 허나 ‘휠체어를 쓰는 손상이 덜한(?) 장애인’ 이란 소리를 들을 지라도 자기 욕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욕망을 과감히 표출하는 것이 곧 세상에서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p.217), “손상된 몸으로 자유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야말로 내 영웅이며, 더욱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핫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많은 이들을 자유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p.221)

나의 행위가 동료의 구원에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욕망에 충실한 건 타자를 자유로 이끌 수 있다. 그 결론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자의 투쟁에 건투를 빈다. 자유를 위하여!

저서명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
저자	김원영 / 출판사 : 푸른숲(2010)

3) 무성성(無性性, asexuality): 섹스에 관심 없는 것, 성적 욕망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것, 그러한 존재

철인을 동경하는 유리인간

참신함과 규범의 경계선상에 놓인 영화 <언브레이커블(Unbreakable)>

글 김지선 모니터링 단원

이번호 서평이 골형성부전증 장애인의 저서입니다. 제가 요청받은 영화도 같은 유형의 장애인 이 나옵니다. 두 글속 장애인은 어떻게 차이 날까요? 주지하다시피 문화계나 언론이 장애인을 다룰 때는 이미지 왜곡이 다반사입니다. 허나 잘 만들어진 시나리오일수록 완성도가 높아 틀린 점을 꼭 짚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캐릭터의 역할에 공감할지 모릅니다. 의도된 결말이 충격적이면 그 안에 담긴 왜곡도 임팩트와 함께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언브레이커블' 은 충분히 그럴만한 영화 같습니다.



영화 언브레이커블(Unbreakable)

그 단서는 감독에게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각본·감독, 나이트 샤말란(M. Night Shyamalan)은 스토리반전 영화의 걸작 '식스센스(The Sixth Sense, 1999)'의 각본·감독입니다. 대략 감이 오시나요? 반전의 주체가 장애인일 거라 추측하셨다면 출발이 좋은 셈입니다.

축구장 경비원 데이비드(브루스 윌리스)는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나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 그가 열차탈선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상이 아니라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채 구조됐다는 점입니다. 골형성부전증 장애인 프라이스(사무엘 잭슨)는 코믹북 거래상인데 만화속 영웅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영똥한(?) 신념가입니다. 그는 뉴스에 나온 데이비드를 만납니다. 프라이스는 데이비드가 중증질환에 걸린 바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대형사고를 수차례 당했음에도 유일하게 생존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의 ‘파괴되지 않는’ 신체는(그래서 영화제목이 언브레이크블 입니다) 영웅의 특징이며, 영웅은 그 능력을 정의실현에 사용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데이비드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의 주장이 계속 입증되자 데이비드 스스로 범죄현장을 찾아 흉악범을 소탕하게 되고 그제서야 삶이 충만해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인생 전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준 프라이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다시 그의 가게를 찾는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데이비드가 겪은 참사들은 프라이스가 영웅을 찾기 위해 준비한 의도된 사고였던 것입니다. 살아난 자는 누구인가? 그 생존자는 같은 사람인가? 그가 바로 영웅이다. 데이비드가 나타납니다. 이제 프라이스는 자기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자라면서 급우들에게 ‘유리인간’ 이라 놀림받고 평생 병원과 휠체어 신체를 지는 깨지기 쉬운(breakable) 존재. 그런 프라이스에게 철인(鐵人) 데이비드는 수백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찾아야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손상이 당사자를 불행에 빠뜨리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신체’ 를 회구하는 의지가 우리의 상식과 도덕을 파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겠지요.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으면 그런 행동을 할까. 영화에는 장애인의 고통이 묘사되어 공감은 가지만 영웅탄생을 알리는 소재로만 활용될 뿐, 고통 자체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반전효과라는 자기 주특기를 살리려고 장애인 캐릭터를 과도하게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영웅탄생의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가장 상반된 캐릭터(신체적 열악)이나 지적 능력은 영웅적인 캐릭터, 그런 대비가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활용하는 데 따른 위험은 대상이 그가 속한 집단 전체를 대표할 정도로 강렬한 기억을 남길 때입니다. 특히 테러·폭력 등 자극적 소재는 인상이 오래 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영화의 기여 덕에 우리는 아랍인하면 테러리스트를 떠올립니다.

손상이 반사회적 행위를 부른다는 주장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입니다. 장애인이 반사회적이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하니까 그런 극단적 행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장애와 무관하게 ‘인간’ 은 누구나 가학적 상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드(Marquis de Sade, 1740~1814)가 좋은 예죠. 하

지만 영화는 장애인을 택했고, 그래서 이 영화도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이색적인 소재는 흥미로우나 뒷맛이 개운치 않네요.

영화정보	Unbreakable, 2000년
감독	나이트 샤말란
출연	브루스 윌리스
